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온라인 정책토론,
예산 낭비 및 공익침해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범정부 국민소통창구
www.epeople.go.kr

국민행복제안센터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온·오프라인 범정부 통합제안센터
(인터넷:국민신문고, 전화:110)

110콜센터

정부의 모든 업무에 대한 상담·안내
및 부패·공익침해 신고까지
가능한 정부대표민원전화
110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국민권익 2013 07+08 vol.33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

국민권익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13 07+08 vol.33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2013 vol.33 7+8월호

발행일 2013년 8월 7일 (격월간, 비매품)
발행인 이성보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편집인 최학균
주소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전화 02. 360. 2761 **팩스** 02. 360. 3520
홈페이지 www.acrc.go.kr
블로그 blog.daum.net/loveacrc
트위터 twitter.com/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veacrc
기획 · 디자인 디자인신화 02. 324. 6852
표지 작가 정윤미
인쇄 (주)이펙피앤피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CONTENTS

7+8 vol.33

기획특집

04 인터뷰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06 커버 스토리 부정청탁 등 부패관행 뿌리뽑는다
10 포커스 국민행복, 소통에서 답을 찾다

희망 전하기

14 청렴한 세상, 행복한 국민 열정과 창의성으로 똘똘 뭉친 대학생 청렴전문가 · 청렴 코치
18 세대공감 소통 유쾌하게 통한다!
20 SNS Talk Talk SNS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22 110 행복 레시피 상담 받을 수 있나요? 110번으로 전화주세요!

권익 더하기

24 국민권익이 간다 육지 속 섬마을, 48년 만에 길이 열린다
28 국민권익 Q&A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요
30 Global ACRC 반부패 · 청렴정책 유럽에서도 통하다
32 숫자로 보는 국민권익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0개로 확대

행복 나누기

34 전통시장 나들이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그곳 울산신정시장
38 이야기 목민심서 공직자의 바이블, 새로 읽는 「목민심서」
40 꼭 알아두세요! 장마철 안전하게 나기
42 건강 365 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여름 질병 '식중독' 조심하세요
44 감성충전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공생과 공존을 위한 공정여행

48 뉴스 & 피플 권익위-인도네시아간 MOU 연장 체결 外
50 독자의 소리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스폰서, 떡값 등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 제재

우리나라 청렴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취임하여,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의 정부 입법안을 마련한 이성보 위원장을 만났다. 이 위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이 '신뢰사회로 가는 마지막 퍼즐인 반부패·청렴문화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 **김성숙**

'부정청탁금지법'이 부처 협의를 마치고 지난 7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정부안이 확정되었는데요.

그동안 부정청탁금지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지만, 실효적인 법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실제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이 법의 구성이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대가성이 없는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되는 직무수행 방지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수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논란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우리 위원회가 입법 예고했던 이른바 원안보다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위헌법률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현재의 법률로는 처벌할 수 없는 영역을 획기적으로 보완한 입법안으로서 협의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법 예고 후 법무부와의 법안 조정 과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법무부도 이 법의 제정 필요성과 전체적인 내용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입법예고안 중 '직무관련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한 형사처벌'이 법리적인 측면에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등 위헌 소지를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관계부처 협의가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된 측면도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권익위원장으로 취임하고 보니 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법안 제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시키고, 법무부 장관과 여러 차례 협의하는 등 위헌논란 없이 실행 가능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나 국민들의 법 제정 요구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안 마련에 많은 노력이 소요되기는 하였으나, 입법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보다 실효적인 법안을 만드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입법 예고됐던 '원안'과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수준이 원안과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최종안에는 직무관련성만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없어도 형사처벌 하도록 원안보다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스폰서, 떡값 등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의 제재수위를 높였습니다.

또한,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의 경우 원안대로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등 헌법상, 법률상의 기본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많다는 판단 아래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제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불문에 부치던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해서 수수한 금품의 2배 내지 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징계하는 것으로도 엄청난 처벌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최종안은 위헌성 시비도 비켜가면서 실질적인 처벌 효과도 있는 입법안으로 잘 정리되었습니다.

반면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대가성, 액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하도록 한 부분은 '과잉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면 이는 곧바로 부패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권익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87%가 공직사회의 알선, 청탁이 대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부패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건에서 스폰서, 떡값 등이 문제가 되었음에도 형법상 뇌물죄의 성립요건인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거액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를 자주 보아왔습니다. 이 법안은 그러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대가성이나 액수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억울한 경우도 생길 수 있겠지만, 이는 일반 형사처벌의 예에 따르면 됩니다.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이라면 정당행위로서 처벌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기본적으로 형벌조항 등을 두어 공무원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고도의 윤리강령법으로서 예방의 성격을 갖는 법이므로 오히려 공무원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계기가 되는 법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와 민간 부문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저는 일부 공직자들이 지연·혈연·학연 등 온갖 네트워크에 갇혀 부패유발적인 공직문화에 젖어드는 것을 종종 보아왔고, 이 점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위 매뉴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부정청탁의 신고와 수수금품의 반환 등 세부처리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는 경우 공직사회의 업무수행 방식과 절차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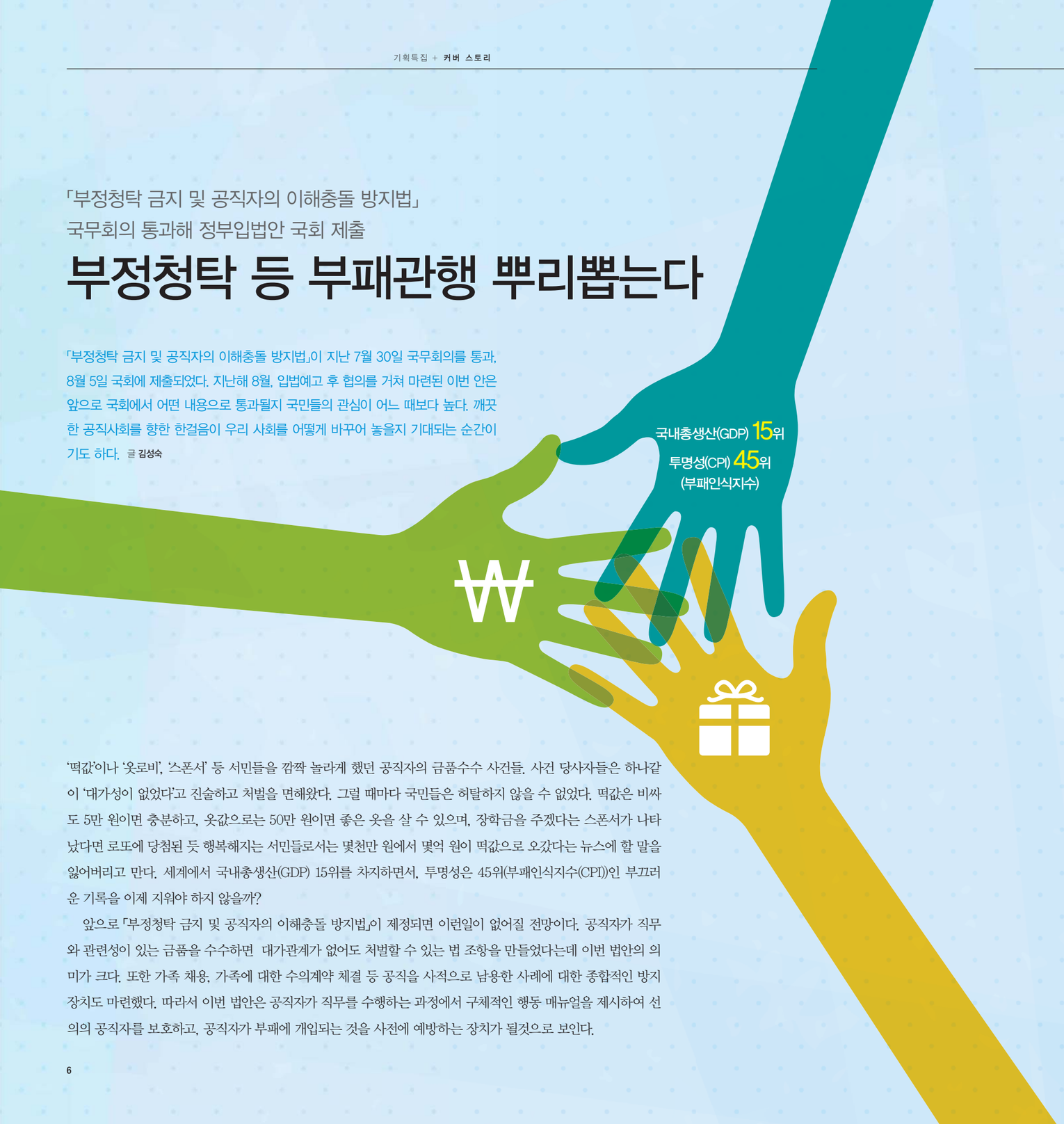
이 법은 부정청탁이나 대가성 없는 금품을 제공한 국민들도 공직자와 같이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부패예방 인프라가 공직사회는 물론 민간분야에까지 확산되면, 민간부패가 상당히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청렴도를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반부패·청렴은 신뢰사회 그리고 선진국 완성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그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해 정부입법안 국회 제출

부정청탁 등 부패관행 뿌리뽑는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 8월 5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지난해 8월, 입법예고 후 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통과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향한 한걸음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기대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글 김성숙



'떡값'이나 '옷로비', '스폰서' 등 서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공직자의 금품수수 사건들. 사건 당사자들은 하나같이 '대가성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처벌을 면해왔다. 그럴 때마다 국민들은 허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떡값은 비싸도 5만 원이면 충분하고, 옷값으로는 50만 원이면 좋은 옷을 살 수 있으며, 장학금을 주겠다는 스폰서가 나타났다면 로또에 당첨된 듯 행복해지는 서민들로서는 몇천만 원에서 몇억 원이 떡값으로 오갔다는 뉴스에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만다. 세계에서 국내총생산(GDP) 15위를 차지하면서, 투명성은 45위(부패인식지수(CPI))인 부끄러운 기록을 이제 지워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면 이런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수수하면 대가관계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만들었다는데 이번 법안의 의미가 크다. 또한 가족 채용, 가족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등 공직을 사적으로 남용한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방지장치도 마련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행동 매뉴얼을 제시하여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고, 공직자가 부패에 개입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가 될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사회 만들기 앞장서겠습니다 WWW.ACRC.GO.KR

그러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모두 없는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원안과 달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돼 '한발 물러선' 법안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공무원들은 반응은 정반대이다. 형사처벌이 아니고 과태료만 물어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처분을 받게 되고, 이는 승진과 승급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이 법안은 당초 2011년 6월 국무회의에서 그 입법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후 공개토론회, 학술대회 등을 통해 국민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의 선진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마련된 것으로 2012년 8월에 입법예고 되었다. 이후 정부입법 과정에서 정부 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모호한 부문을 정비하고 위헌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등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안이 확정되었다.

이번 법률안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금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가 주된 내용이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국무회의 의결안〉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 없음
	공직자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 원 과태료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제3자(공직자 제외)	2천만 원 과태료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3천만 원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2년 징역, 2천만 원 벌금
금품수수 금지	직무관련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한 금품수수 공직자 * 가족이 수수한 금품 등을 신고, 반환, 인도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 등을 공직자 또는 가족에게 제공한 자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직무관련 및 명목 여하 불문하고 금지 금품 수수 공직자 * 가족이 수수한 금품 등을 신고, 반환, 인도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 등을 공직자 또는 가족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기준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	500만 원 과태료
이해충돌 방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고위공직자	3천만 원 과태료
	금지된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하거나 계약 등을 체결한 공직자	2천만 원 과태료
	소속·산하기관에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한 고위공직자 등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한 공직자	3천만 원 과태료
	사적으로 노무제공을 받은 공직자	2천만 원 과태료
	소속기관 명칭, 직위 등을 사적으로 이용한 공직자	1천만 원 과태료
	직무상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한 공직자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직무상 비밀을 이용,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	7년 징역, 5천만 원 벌금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 시 과태료 부과

먼저, 부정청탁의 금지다. 부정청탁 개념의 모호성과 혼란을 피하고 부정청탁 신고와 처리 절차를 명문화했다. 부정청탁은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의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말한다. 제3자가 개입하는 부정청탁만 과태료로 처벌하고, 이해관계자 자신이 직접 제기하는 청원, 민원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과의 건전한 의사소통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였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거듭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하였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가 부정청탁과 관련되는 직무에 참여하는 것을 일시 중지하거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는 등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관리장치도 마련하였다.

직무와 관련되는 금품수수는 대가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두 번째,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는 무조건 제재하도록 명시했다. 공직자는 물론 금품을 제공한 사업자도 제재를 받고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해도 공직자가 제재를 받는다.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이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즉 대가성이 없지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부분이 원안에서 수정된 부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이다. 원안은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이 없고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하도록 하자는 안이었다.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받은 경우 원안은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100만 원 미만도 형사처벌 대상이 돼 직무 관련자의 금품수수는 원안보다 강화된 측면도 있다.

이외에도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도 공직자와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되고,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 등을 받은 것을 알고도 반환·인도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를 제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직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 반환, 인도 등의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가족과 친지 밀어주기 관행도 제한한다

세 번째 내용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다. 우리에게 낯설은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는 미국 공직자윤리법에 있는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츠(Conflict of Interests)에서 왔다. 즉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공직자의 가족, 친족이 직무관련자가 되는 등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관리절차를 따라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규로 임용된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재직하던 민간기업 등에 특혜를 제공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부문 재직 시 활동사항을 사전에 신고·관리토록 하고, 이해관계 있던 고객 등과 재정보조, 인·허가, 조세부과, 수사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의 수행을 제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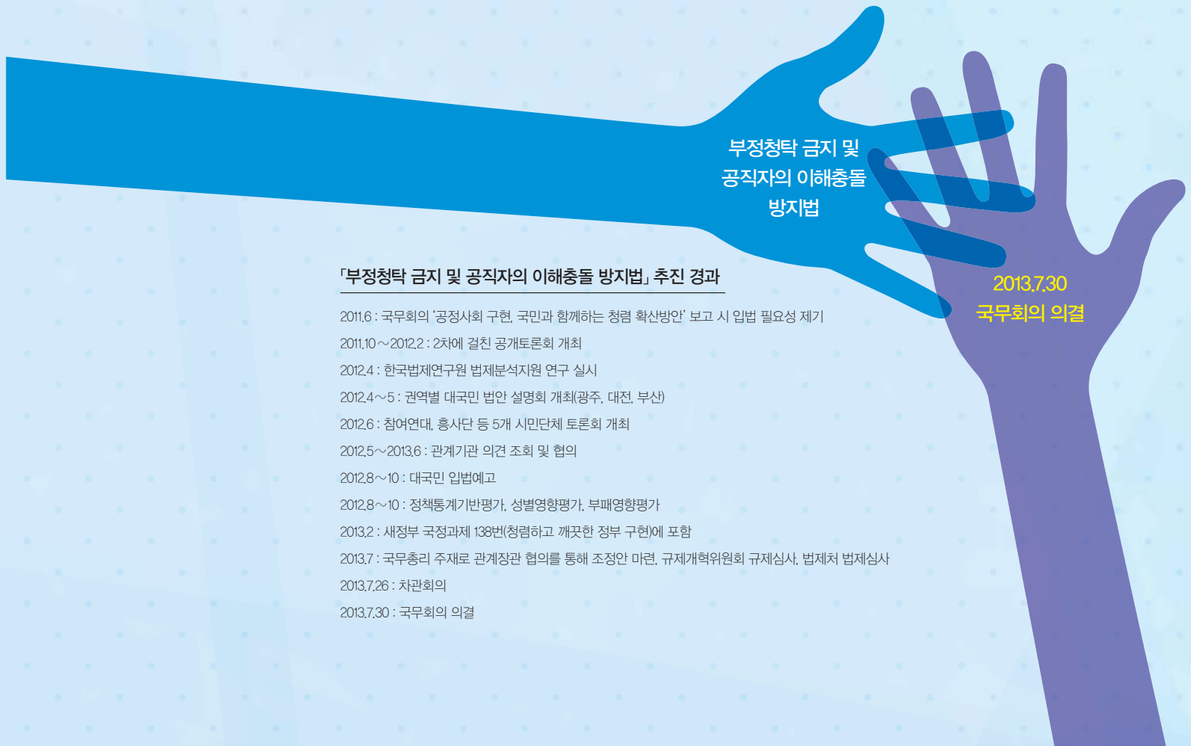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이외에도,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을 자신이 근무하는 소속기관 등에 특별채용하거나 수의 계약을 통해 가족 등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금지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이나 부동산 거래 등도 제한된다. 또한, 직무관련자에게 대가를 받고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해주거나 직무와 충돌될 수 있는 이해단체, 협회 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것 등이 제한된다. 이 밖에도 예산·공공물품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공직자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받는 것과 공직자의 직위·소속기관명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동산 개발정보·금융정보·단속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하였다.

미국(1962년), 캐나다(2006년) 등 OECD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다양한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운영하여 왔으며, 우리나라도 이 법 제정을 통해 늦은 감이 있으나 선진국 수준의 종합적인 공직윤리규범을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번 법안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244개의 지방자치단체와 824개의 공직유관단체 등 전체 공공기관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업무수행 절차를 개선토록 하여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학연과 지연 등을 중히 여기는 문화 때문에 공직 사회 또한 불분명한 청탁과 연고문화가 존재했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의 세금이 오남용 되고 나아가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암적 존재였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공직사회가 먼저 투명해지고 대한민국 모두가 더불어 투명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추진 경과

2011.6 : 국무회의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방안' 보고 시 입법 필요성 제기
2011.10～2012.2 : 2차에 걸친 공개토론회 개최
2012.4 :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 연구 실시
2012.4～5 : 권역별 대국민 법안 설명회 개최(광주, 대전, 부산)
2012.6 : 참여연대, 흥사단 등 5개 시민단체 토론회 개최
2012.5～2013.6 :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협의
2012.8～10 : 대국민 입법예고
2012.8～10 : 정책통계기반평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2013.2 : 새정부 국정과제 138번(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에 포함
2013.7 :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협의를 통해 조정안 마련,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법제심사
2013.7.26 : 차관회의
2013.7.30 : 국무회의 의결

국민행복, 소통에서 답을 찾다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국민과 공유 · 소통하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정부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국민과의 최접점에서 연간 330여만건의 국민의 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3.0의 중심에 서 있다.

글 김희정

정부 3.0이 뭔가요?

정부 3.0이란 정부가 국민에게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라는 개념을 근간에 둔 정부 3.0은 '정부중심'의 운영체제였던 정부 1.0과 '국민중심'의 정부 2.0을 뛰어넘어 '개개인중심'의 맞춤형 행복을 지향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기존의 정부 1.0이 직접방문을 통한 일방향·제한적 정보공개를 통해 효율성을 추구했고, 정부 2.0이 인터넷을 통해 양방향 정보제공을 추구하며 참여를 이끌었다면, 정부 3.0은 스마트 모바일 등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다.

이는 정부와 국민의 양방향 소통채널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 3.0이 추진됨에 따라 국민은 이제 충분한 알 권리를 누리게 된다.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위생, 치안, 복지, 지리, 기상, 교통 등의 정보를 관계 기관이 국민에게 실시간 공개하고, 주요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때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통해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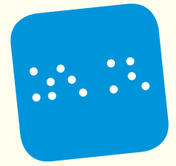
정부 3.0 구현을 위해 권익위가 나선다

정부 3.0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권익위는 온라인 국민신문고와 110(정부민원콜)을 활용한 '범정부 정책소통체계'를 활성화해 정부 3.0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범정부 정책소통체계는 다음과 같다. 국민신문고와 110콜센터, 국민행복제안센터 등을 통해 국민의 소리를 접수하여 이를 주기별, 이슈별로 분석한

다. 또한 국민신문고와 주요 포털(네이버, 다음 등)을 연계한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소통의 장을 마련하며, '국민의 소리'에서 나타나는 국민 불편과 부패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는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

추진과제는 크게 7가지다. ①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 및 전자공공토론 활성화와 ②민원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 ③시각장애인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 ④현장에서 고충을 해결하는 이동 신문고 운영, ⑤정부콜센터 통합으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 ⑥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지원 강화, ⑦행정심판허브시스템 구축 등이 그 내용이다.



국민의 작은 소리도 더 많이 듣기 위한 노력

권익위는 국민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위해 온·오프라인 '국민행복제안센터'를 지난 5월 개소했다. 온라인 채널은 국민신문고가, 전화는 110콜센터, 직접 방문은 상담센터를 활용해 국민 누구나 정부의 정책과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제안할 수 있다.

'국민의 소리'를 모으는 과정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권익위는 취약계층의 민원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과 공공기관 민원담당자간의 원활한 상담을 위해 110콜센터에 수화전문상담원을 통한 인터넷 화상 수화통역 서비스를 지난해 6월 개통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충민원 점자서비스도 지난 5월부터 시작했다. 앞으로는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음성파일, 확대문자, 전자 텍스트 파일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외국어 민원창구도 개인별 맞춤 정보제공을 지향하는 정부 3.0에 부합하는 서비스다. 권익위는 한국어가 서툴러 우리 정부에 민원을 제출하기 어려운 재외동포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편리하게 민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08년 영어를 시작으로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등의 외국어 민원창구를 국민신문고에 개설했다.

권익위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권익보호 향상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키르키즈스탄, 태국,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등에 재외국민 전용 민원접수 온라인 창구를 개설해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도 불편 없이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소통 공간 마련

국민신문고와 110(정부민원콜), 국민행복제안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는 '국민의 소리'는 하루 평균 1만여 건, 다양한 채널로 접수된 국민의 소리는 권익위가 일간, 주간, 월간 단위로 분석해 범정부적으로 공유한 후 소관부처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권익위는 지난 2006년에 이미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서비스를 개시해 연구기관과 민간포털, 관계기관 SNS와 연계한 참여 채널을 확보하며 국민의 참여를 높여왔다. 지난해에는 영유아 지원정책, 청년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기획토론을 진행해서, 토론결과와 민원동향 등을 종합 분석한 자료를 관계부처에 제공해 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지난 5월에는 국민들이 손쉽게 정책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개통했다.

온라인 정책토론도 활발하다.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식약처와 함께 진행한 '불량식품 근절 대국민 온라인 토론'에서는, 네티즌 1,257명이 참가했으며, 참가한 국민의 의견은 관계부처에 제공되어 '범국민 불량식품 근절 추진계획'에 반영

되었다. 또 지난 7월1일부터 26일까지는 '우리나라 사교육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토론을 진행했다. 그동안 사교육 문제에 대해 가져왔던 국민의 생각들이 국민신문와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운영하는 아고라에 쏟아져 나왔고 이러한 의견들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면밀히 분석 한 후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되어 제도개선, 정책수립 등에 활용된다.

정책에 반영되는 '국민의 소리'

국민의 소리를 잘 듣고 분석까지 마쳤다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권익위는 그동안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손톱 밑 가시' 같은 국민의 애로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버스·지하철·여객선 등 대중교통별로 제각각인 국가유공자 신분증명 서류가 국가유공자 증으로 일원화되는 등 불필요한 서류가 생략된다.

저소득 근로자, 소비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가산세, 과태료, 수수료 등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부담도 완화된다.

국민편의를 위한 정보공유, IT 등을 활용한 방안도 눈에 띈다.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하던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록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보험사별로 각종 증빙서류를 불필요하게 중복해서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서류가 표준화·간소화된다. 자동차 무상수리정보, 공동주택 동·호수 추첨결과, 압류통보 등 각종 정보의 문자나 이메일 고지 및 안내도 강화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도 반가운 소식이다.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서 학교보안관과 경비인력 채용 시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경력조회가 의무화되는 등 성범죄,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재혼가정 자녀가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거인'이라고 표기되던 방식이 변경되는 등 재혼가정, 장애부모 자녀 등 보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고충도 해소된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개선도 눈에 띈다. 보훈병원의 여성입원환자용 다인실을 확대했고, 대학 등록금 납부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납부제를 확대하고, 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통신·의료·교육비 감면혜택도 늘리고 있다.

국민의 불편을 미리 해소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

앞서 소개한 '손톱 밑 가시' 제도개선 내용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콜센터에 접수된 반복 민원을 검토해 개선하게 된 사례로, 총 43건이 추진된다. 그동안 국민을 불편하게 했던 '손톱 밑 가시'같은 고충 민원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는 국민의 작은 소리를 모아 정부 정책에 담는 권익위의 범정부 정책소통체계를 통해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국민은 거창한 정책보다 생활 속 작은 불편이 해소되는 것에서부터 정부를 신뢰하게 된다.

서로의 벽을 허물고 다가가는 것에서부터 신뢰가 시작되고 행복도 싹트는 법.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정부 3.0'의 성공을 통해 국민 모두가 함께 소통하며 행복을 누리는 시대가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희망 전하기

14
청렴한 세상, 행복한 국민
열정과 창의성으로 똘똘 뭉친
대학생 청렴전문가 · 청렴 코치

18
세대공감 소통
유쾌하게 통한다!

20
SNS Talk Talk
SNS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22
110 행복 레시피
상담 받을 수 있나요?
110번으로 전화주세요!

01

열정과 창의성으로 똘똘 뭉친

대학생 청렴전문가 · 청렴 코치

'대학생 청렴전문가 및 청렴 코치 육성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낼 예정이다. 올 연말까지 이 프로그램을 마치면, 이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청렴 교육·홍보전문가로 거듭날 것이다. 글 **김희정**

대한민국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대학생들이 발 벗고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국민참여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생 청렴전문가와 청렴 코치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반부패·청렴 문화의 저변을 확대해 사회 전반의 부패 저항력을 높이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다. 아울러 미래의 청렴 교육·홍보전문가를 육성해 청렴의식을 확산하고 국민 참여를 통해 청렴 정책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도 기대하고 있다.

대학생 청렴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대학생 청렴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직접 청렴 교육·홍보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 봄으로써 청렴의식 및 청렴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대학생들이 기획한 콘텐츠 중 우수작은 실제 청렴교육·홍보업무에 활용된다.

대학생 청렴전문가들은 4~6명이 팀을 이뤄 5개월 동안 청렴 홍보 동영상(UCC) 제작과 청렴 교육 강의안 제작, 청렴교육용 영상물(애니메이션,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시나리오 작성, 참여형 강의프로그램 구성 및 시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매월 팀별로 소정의 활동비가 지원되고, 활동 실적에 따라 매월 인센티브도 별도로 지급된다. 활동 종료 후에는 성과보고 대회를 거쳐 우수한 성적을 거둔 4개 팀에 국민권익위원장 명의의 상장과 장학금도 수여한다.

02

01 70여 명의 청렴전문가 · 청렴코치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02 참가자 대표가 활동 시작에 앞서 선서문을 읽고 있다.

Anti-Corruption Expert

청렴 코치 육성 프로그램

청렴 코치 육성 프로그램은 청년층을 청렴교육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대학생, 대학원생 및 졸업생 등 청년층이 직접 청소년 대상 청렴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렴 교육을 진행해 봄으로서 향후 청렴교육 강사 등 관련분야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렴코치 참가자들은 7개월 동안 개인 또는 팀을 이뤄 청소년 대상 청렴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 청렴 훈련 교육 진행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활동 기간 중에는 매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팀 활동의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따로 지급한다.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청렴교육 강사나 관련 민간단체에서 청소년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청렴전문가·청렴 코치 본격 활동 시작

지난 5월, 대학생 청렴전문가와 청렴코치 육성 프로그램 공개모집 이후 1,2차 심사를 거쳐 총 70여 명의 참가자가 선발되었다. 이들은 지난 7월 2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동원리더스아카데미에서 '대학생 청렴전문가 및 청렴 코치' 워크숍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워크숍은 대학생 청렴전문가·청렴 코치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반부패·청렴에 대한 기본 이해를 높이고, 공직자 및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콘텐츠를 기획·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다.

7월 2일에는 발대식, 청렴 일반 소양 교육 등 대학생 청렴전문가·청렴 코치 공동으로 워크숍이 열렸고, 7월 3일부터는 대학생 청렴전문가와 청렴 코치 각각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03

04

03 강의를 집중해서 듣고있는 참가자들.

04 워크숍에 참가한 학생들이 진지하게 청렴 강의를 듣고 있다.

05 청렴 코치 육성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교육 모습.

06 청렴전문가 활동에 필요한 강의를 듣고 있는 참가자들.

05

국민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의 다양한 참여와 체험은 과거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한 초·중·고등학생 글쓰기 대회, 지역과 대학사회를 거점으로 한 대학생 청렴홍보단 운영, 청렴교육 우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역사 속 청렴 사적지 탐방', 블로그나 SNS 등 소셜 미디어 활성화에 맞춘 청렴콘텐츠 공모전,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온 것. 하지만 권익위에서 국민 참여 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후 참가자를 모집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국민이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활동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1회적으로 끝나는 행사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 대학생 청렴전문가와 청렴 코치 육성 프로그램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한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의 창의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청렴 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대학생 청렴전문가와 청렴 코치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는 다시 청렴교육을 위해 쓰인다. 프로그램 참가자들도 현장에서 청렴 문화 전도사로 활동할 수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이 만들어내는 우수한 콘텐츠는 대한민국 청렴 문화를 꽃피울 씨앗이 될 것이다. 오는 연말까지 이어지는 이들의 활동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에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주길. 대한민국 청렴 문화가 약동하는 순간이니 말이다.

06

유쾌하게 통한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보다 길기 때문에 직장 내 동료와 상사, 부하간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 직장 내 관계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직장 내 소통은 직장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직장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과 소통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며 유쾌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국민과 진정한 소통을 실현하고 있는 권익위 소통 문화를 소개한다. 글 **김희정**

파이팅 외치며 하나가 되다

소통과 화합을 위한 방법으로 운동경기만한 것이 없다. 지난 5월부터 7월에 걸쳐 열린 '제1회 위원장배 족구대회'는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잔치였다. 족구대회는 서소문공원과 미동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이뤄졌으며, 전 부서가 참가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7월 6일 준결승과 결승을 거쳐 최종 우승팀이 확정되어 3개월에 걸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권익위 직원들은 세대와 승패를 떠나 운동으로 하나가 됨을 느꼈다. 운동을 통해 직원 간에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참가자들은 땀방울만한 함박웃음을 지어보였다. 즐겁고 활기찬 문화가 업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권익위가 되길.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된 권익위 직원들의 얼굴이 참 밝고 믿음직스럽다.

이끌고 따르는 멘토 · 멘티

업무 중에 소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멘토링 제도다. 멘토링(mentoring) 제도는 회사나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멘토)이 조직 구성원(멘티)을 1대 1로 전담하여 지도 · 코치 · 조언함으로써 그들의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 · 성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권익위도 신규 또는 전입직원이 환경과 업무에 쉽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는 멘토 · 멘티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규발령, 전입, 타 부처 파견으로 업무가 낯선 초임자는 멘티가 되고 1년 이상 해당업무 또는 유사업무 경력이 있는 동일부서 내 직원은 멘토가 된다. 멘토와 멘티는 인사발령 후 1주일 이내에 부서장이 지정하고 멘토링기간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멘티는 멘토로부터 업무 수행 방향과 방법, 절차 등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또한 업무철학 공유, 공직자세 확립, 대인관계 활성화, 공직생활 조언 등 권익위 조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

소통은 조직의 생산성과 직결된 문제다. 멘토 · 멘티제를 통해 권익위 직원들은 직원 간 업무 방법이나 경험 등을 공유하며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감동을 공유하는 문화 소통

멘토 · 멘티제를 통해 업무를 공유했다면, 오페라나 뮤지컬 감상을 통한 문화 공유도 소통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오페라나 뮤지컬, 영화 DVD 등을 자료실에 비치해 직원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카르멘〉, 〈아이다〉 등 유명 오페라 DVD와 이러한 오페라를 공부할 수 있는 도서를 함께 비치해 직원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예술 장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성보 위원장은 "제 취미가 클래식 음악과 영화 감상인데, 제가 받은 감동과 여운을 직원들과도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에 권익위 자료실에 DVD 자료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만큼이나 내부 직원들과의 소통도 중요한 일입니다. 직원들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고 활기차게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SNS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는 SNS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실시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보제공은 물론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오가는 SNS 세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난 50여 년간 교통불편을 겪어온 임실군 옥정호의 수암마을을 둘러보고, 진입로를 조기에 개설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동신문고 및 현장조정 등을 위해 많은 현장을 다녀오지만 이번 수암마을처럼 접근하기가 힘든 지역은 처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국민들의 애환과 아픔이 있는 민생현장을 찾아 관련기관과 함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sb56acrc (6월 27일)

twitter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 트위터

국민권익위원회의 주기적 점검으로 대부분의 기관이 민원처리기간을 잘 준수하고 있으나, 미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준수율을 개선해 나갈게요! (7월 22일)
자세히 보기 : http://blog.daum.net/loveacrc/6723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태국걸홈)

"키 크려면 우유 많이 먹어라!"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우유가 성장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에도 좋다는 사실 아세요? 와이셔츠에 묻은 잉크 얼룩을 지우는 데 우유가 좋다고 하네요 ㅎㅎ 페친들만의 우유 사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7월 21일)

시중 슈퍼나 마트에 판매하는 이런 원재료 컵팔빙수에 우유를 부으면 잘 녹으면서 맛도 부드럽습니다. (김진국)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전화 폭언녹취제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한편, 하반기부터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개별 고질민원인의 특성에 적합한 조사관을 배정하여 처리케 하는 '맞춤형 처리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http://blog.daum.net/loveacrc/6714 (7/18)

서로 서로 존중해주는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요~^^ (정명섭)

더운 여름 남친, 여친과 어디로 놀러 가야하나? 누구나 한 번씩은 하는 고민이죠? 남친 여친이 없다구요? 미래의 남친, 여친들을 위해서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고민 해결을 위해 무릎팍 도사, 아니 ^^;; 국민권익위원회가 왔습니다!!
남친, 여친과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세요~
(6월 17일)
자세히 보기 : http://blog.daum.net/loveacrc/6641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nanokorea)

페친 여러분은 독서할 때 종이책으로 하시나요? 전자책으로 하시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종이책이 더 좋답니다.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는데요, 휴가 때 다들 뭐 하실 계획이신가요? 바다로 산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휴가 때 책 한 권을 읽는 건 어떨까요?

저는 종이책이 좋아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 것도 재밌고 종이향기도 좋아요^^ (이혜원)

근로장려금 지급 시 법률상 자녀가 아닌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실질적 부양여부에 상관없이 부양자녀에서 제외되어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 재혼자녀가 포함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어요.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해요! (7월 23일)

반드시 강력히 권고하여 실행되면 다시 한 번 올려주세요.(귀여운가은이)

새로운 가족에 좋은 힘이 되겠네요. 앞으로도 더 좋은 정책을 기다립니다.(안복순)

소셜미디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친구가 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여러분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공유하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요즘, 다음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댓글이 소개된 분들에게는 모바일 음료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이 소개된 분들은 이메일(limbr@korea.kr)로 핸드폰 번호를 보내주세요.)

facebook	twitter	me2DAY	yozm	Daum	카카오스토리
https://www.facebook.com/loveacrc	https://twitter.com/loveacrc	http://me2day.net/loveacrc	http://yozm.daum.net/acrc0229	http://blog.daum.net/loveacrc	카카오스토리 친구찾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acrc'를 검색한 후 권익위 소식을 받아보세요.

상담받을 수 있나요? 110번으로 전화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정부 민원에 대한 모든 궁금하고 불편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대표민원전화 서비스입니다.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는 한 상담사의 상담 내용을 소개합니다.

무더위로 인한 고단함을 씻어주는 단비가 시원하게 내린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다.

"저기…, 제가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았는데 여기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수화기 너머로 들린 민원인의 목소리가 떨고 있는 듯해 민원인의 긴장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인 110번으로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은 여러 기관에서 해결 하지 못하고 마지막 희망으로 연락해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들에게 바로 행정부처로 전화를 연결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결이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을 하게 될 때면 상담자로서 미안함이 느껴진다.

더군다나 나도 금전적인 문제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인의 안타까운 사연에 진심으로 공감했고, 어느 때보다도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민원인의 사연을 듣고난 후 고용노동부 측으로 바로 전화를 연결하는 것보다 데이터를 이관해서 해결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사연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전달하면 좀 더 정확하게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로 내용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순서대로 처리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합니다."

안내한 후 통화를 종료하려는데, 고맙다며 감사인사를 하는 민원인 목소리가 처음보다 한결 밝아진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

해결이 잘되었는지 궁금하여 다음날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어떤 민원보다 긴장되었다.

"잘 해결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내 일인 것처럼 설레고 기뻤다.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드린 건 아니었지만 110번을 통해 해결점을 찾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뿌듯함도 느껴졌다.

아직도 어딘가에서 110번을 알지 못한 채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인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분들에게 외쳐본다.

"110번으로 전화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권익 더하기

24
국민권익이 간다
육지 속 섬마을, 48년 만에 길이 열린다

28
국민권익 Q&A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요

30
Global ACRC
반부패 · 청렴정책 유럽에서도 통하다

32
숫자로 보는 국민권익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0개로 확대

육지 속 섬마을, 48년 만에 길이 열린다

‘지방도 717호선 조기 건설 및 수암마을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현장조정회의의 스케치

지난 6월 26일, 전북 임실군에 위치한 운암면민원중개소에서 ‘지방도 717호선 조기 건설 및 수암마을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현장조정회의가 열렸다. 이날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지난 48년 동안 고립무원의 땅에서 살아온 수암마을 주민들의 오랜 고충인 육로개설 민원이 해결되었다.

글 **김희정**

수암마을 현장을 살피고 있는
이성보 위원장, 강완묵 임실 군수와 관계자들.

아름다운 자연 속에 감춰진 고립의 땅

전북 임실군 운암면 운정리에 위치한 ‘수암마을’은 섬 아닌 섬마을이다. 지난 1965년 섬진강댐이 건설되면서 물길에 주변이 막혀 아예 섬처럼 고립되었다. 수암마을 뒤에는 험한 산이 버티고 있고 앞에는 호수가 펼쳐져 있어 주민들은 배가 없으면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수암마을 앞에 펼쳐진 호수는 섬진강댐을 건설하며 생긴 옥정호다.

‘옥정호’는 관광지로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수암마을 주민들의 아픔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수암마을에는 현재 15가구가 살고 있는데, 48년 동안 이곳 주민들은 작은 배를 이용하거나, 뒷산 사유지에 무단으로 임도를 내 이용하며 힘들게 세상과 소통을 해왔다.

뱃길에 의존해온 수암마을 주민들은 언제나 안전사고에 노출된 상태였다. 1965년부터 1987년까지 옥정호를 건너다 사망한 주민만 40명. 지난 2007년에도 배가 전복되어 한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젠 그마저 끊겨버린 상태.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소형선박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육로도 상황은 만만치 않다. 수암마을에서 수방마을까지 낸 임도도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상황. 임도를 무단으로 냈다는 이유로 수암마을 주민들이 현재 「산지관리법」 등의 위반혐의로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되었고, 결국 수암마을은 육로와 수로가 모두 막혀버린 고립무원의 땅이 되어버렸다.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이 현장에서 브리핑을 받고 있다.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과 관계자들이 현장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타고 수암마을로 이동하고 있다.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과 신청인 대표 최일권 씨가 조정 합의서를 들고 환하게 웃고있다.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이 수암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현장조정회의에 참석한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과 관계자들.

소통을 통해 희망을 찾다

희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다. 강진과 운암을 잇는 지방도 717호선이 개설되고 이 길과 이어지는 국도27호선에 수암마을로 진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만 생기면 수암마을은 오지의 땅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지방도 717호선은 도로개설까지 10년이나 걸리는 장기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수암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당장 해결될 희망은 없었다. 이에 지난 2012년 11월 5일에 수암마을 주민 720명이 집단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하게 되었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수암마을 주민들의 절박함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다음날 고충민원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그 달 15일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전라북도, 임실군으로부터 고충민원 자료를 제출받고 해결방안을 협의했다. 그리고 올해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고충민원 신청인과 수자원공사, 전라북도, 임실군과 함께 현지방문 조사 및 해결방안 논의가 이뤄졌고, 3월에는 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와 해결방안을 협의했다. 그리고 3월부터 5월까지 권익위에서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했으며, 권익위의 조정안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수용 의사를 확인한 후 지난 6월 26일 권익위의 이성보 위원장이 주재하는 현장조정회의가 임실군 운암면민원중개소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48년 만에 소통의 길이 열리다

이날 현장조정회의에는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을 비롯해 신청인 대표 최일권 씨와 피신청인 박성일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강완묵 전라북도 임실군수가 참석했다. 수암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내용은 지방도 717호선을 조속히 건설하는 한편 지난 48년간 고립된 수암마을로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수암마을에서 운암리(국도 27호선)까지 연결되는 임도를 개설해주고, 도로 개설 전까지 선박 운행을 허가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할 당시 전라북도는 '지방도 717호선은 도로정비기본계획상 장기사업에 해당하고, 도로를 개설할 시급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조기개설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임실군은 이미 지방도 717호선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임도 노선 선정기준 상 도로로 고시된 노선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임도노선으로 선정할 수 없다며, '운암리에서 수암마을까지의 임도개설은 불가하나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만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권익위의 방문조사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에 대한 조정 ·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전라북도지사는 전북 임실군 운암면 운정리와 금기리, 강진면 문방리와 옥정리 등 옥정호 주변 지역의 발전과 교통편의 및 안전한 통행을 위해 현재 도로정비기본계획상 장기계획사업으로 고시되어 있는 지방도 717호선(강진~운암간 5.8km)을 2013년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 시 단기계획사업으로 변경하고, 교통수요와 토지이용계획의 변화, 지역균형발전, 도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임도사업비에 대하여는 임실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것을 약속했다.

전라북도 임실군수는 산림의 경영 및 보호와 수암마을 거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인근 수방마을에서 수암마을까지의 임도를 2014년 임도신설사업에 반영하여 개설하고, 임도개설이 완료될 때까지 옥정호 환경관리선(배)을 신청인들이 응급 또는 비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임도개설은 토지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임도개설 공사가 다소 늦추어 질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현장조정회의를 진행한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지난 48년간 진출입에 불편을 겪고, 귀중한 생명까지 잃은 수암마을의 주거환경 및 교통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낙후된 옥정호 주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수암마을과 임실군 옥정호 주변지역이 더욱 발전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하며 "전라북도와 임실군 관계자께서는 조정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조정내용에 대한 이행상황을 꾸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며 마무리했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요

[국민권익 Q&A]에서는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인 행정심판, 또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 내용 등을 Q&A 형식으로 재구성해 소개합니다.

Q 취업 준비생인 저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에서 제가 과거에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 중복으로 지원을 받았으니 훈련비용 전액을 회수하라고 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줄 수 없다는 건데, 저는 그런 내용도 몰랐고 또 카드도 발급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내일배움카드는 별개의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훈련비용을 돌려달라니, 억울합니다.

* **내일배움카드** : 고용노동부에서 단시간근로자,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카드로 계좌한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음.

*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구직의욕 강화, 취업계획 수립,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능력 증진, 직장적응력 증진, 취업알선이라는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

A 행정청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계좌제 훈련 이력을 조회하여 3회 이내일 경우만 카드를 발급해야 한다고 취업성공패키지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카드발급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발급한 것은 행정청의 귀책사유가 크므로, 민원인에게 훈련비 전액을 회수한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훈련한도에 관하여 정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조가 다소 명확하지 않아 일반국민으로서는 기존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과 별개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Q 신설 병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병원의 환자를 유인하며 금품을 제공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영업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 아닌가요?

A 지난 6월, 타병원에 입원 중인 신부전증 환자를 자신의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해온 간호사 및 의료재단 대표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고발당한 의료기관은 특정인을 고용해 타 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신부전증 환자들을 자신의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고, 소개자와 입원환자에게 매월 20만 원씩의 금품을 지급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보건소는 의료기관 간호부장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 및 면허자격 정지를 요청했고, 의료재단 대표에게 양벌 규정에 따라 「의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고발 조치했습니다.

Q 지금 다니는 회사의 모회사에서 근무하던 저는 지난 2010년 경영상 부득이한 이유로 모회사에서 별도로 설립한 관리도급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바뀌었지만 모회사에서 하던 일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모회사에서 시행해오던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이 거부되었습니다. 2010년 6월 관리도급사로 분리된 이후 현재까지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왔고, 최초 신고한 취업규칙에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으나, 이후 취업규칙을 보완 · 작성해 지방노동청에 신고한 적도 있는데,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 **임금피크제 보전 수당지원금** : 기존의 정년을 보장하거나(정년보장형), 정년을 연장하면서(정년연장형) 일정 연령 이후부터 삭감한 임금의 일정금액을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에게 보전하여 주는 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정년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특정 나이 도달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은 연령차별)에 따라 정년보장형은 2011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고, 2011년부터는 기업에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되었음.

A 기존의 모회사에서 노 · 사간의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정년연장형)를 시행해 왔고,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모회사와 현재의 회사가 약정한 도급합의서와 모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현재의 회사로 옮겨 계속해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이 만 56세가 되는 해의 임금이 전 해의 임금보다 약 30% 삭감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회사는 2010년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정년연장형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 · 부당합니다.

Q 아파트 건축 · 분양을 위해 부지를 매입했는데, 당시 부지 주변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매입 후 울타리를 정비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울타리 내부 도로를 점유했고, 도로부지를 무단점유했다며 변상금 및 사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울타리 내부 도로는 울타리와 상관없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변상금과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억울합니다.

A 사업부지 매입 전에 이미 울타리가 있었고, 울타리 내부 도로는 현재까지 그 본래 용도인 도로 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며, 부지 내 거주민들이 울타리 내부 도로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도로를 민원인이 독점적 · 배타적으로 사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울타리 내부 도로에 대하여 별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허가를 받았더라도 사용료 부과 산식이 아닌 변상금 부과 산식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합니다.

반부패 · 청렴정책

유럽에서도 통하다

우리나라의 청렴 정책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을 비롯한 권익위 대표단이 6박 8일 일정으로 유럽의 주요 기관을 방문했다. 권익위 대표단은 국제투명성기구(TI)와 베텔스만 재단 등 국제 평가기관과 반부패 교육전담 국제기구인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UN마약범죄국, OECD사무국 등 반부패협약 이행 관련 국제기구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반부패 노력을 제대로 알리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 및 유대 강화를 위한 논의를 마치고 돌아왔다. 글 **김희정**

UN마약범죄국(UNODC) "공익신고자 보호법 인상적"

권익위는 유럽 순방 첫 번째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한 UNODC를 방문해 UN반부패협약 이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동향 및 활동상황을 파악했다. 이와 함께 2011년 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민간분야 공익신고자까지 그 보호 범위를 확대한 성과와 현재 제정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소개했다.

UNODC 측은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상당히 인상적이라며,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 법률이 많지 않아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100여개의 대상법률 확대를 위한 법개정이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한 청렴도 평가로 UN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고 개발도상국과 MOU를 맺어 반부패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을 전했다. 특히 지난 6월, 13개국 반부패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를 연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UNODC 측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권익위의 반부패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대단히 인상적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른 나라에 대한 반부패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끌어줄 것을 요청했다.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에 기여금 전달

반부패 교육 전담기구인 IACA에 권익위의 기여금 전달 행사가 둘째 날 IACA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향후 인적자원을 제공하는 등 교류협력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권익위는 외국 공무원 대상의 반부패 정책 초청연수와 함께 외국 공무원 청렴교육 과정을 개설해 아시아, 아프리카 등 반부패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교육을 실시했음을 IACA에 소개했다.

또한 반부패 분야의 이론적 연구와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2년 10월 청렴연수원을 개설해서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IACA 측은 권익위가 반부패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의 반부패 정책추진 및 교육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IACA의 반부패 석사 교육과정에 청렴도 평가 프로그램을 2014년부터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IACA 측은 IACA 석사프로그램 강의를 실시할 교수요원 선발과 관련해 금년 방콕에서 개최될 당사국 회의와 연계한 비공식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우리 측의 교수요원 지원 희망자에 대해 전화 컨퍼런스 또는 인터넷 화상 인터뷰 등을 통해 구체적 참여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OECD "아태지역 부패예방 활동에 있어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프랑스에 위치한 OECD에 방문해 OECD뇌물방지협약의 성실한 이행에 대한 권익위의 적극적인 역할 및 협약의 권고안 이행을 위한 국내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OECD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의 협약이행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권익위가 아태지역에서 반부패 리더십을 발휘하고 성공적인 반부패 정책 경험을 전수해주길 요청했다.

권익위는 2012년 11월 개최된 국제반부패회의 시 OECD가 주관한 신고자보호 세션에 연사로 초청되어 우리의 부패방지 활동 성과와 경험을 공유한 점을 언급하고, 이와 같이 우리의 우수한 반부패 시책을 소개할 수 있도록 OECD가 개최하는 워크숍이나 반부패 회의에 적극 협력할 의사를 밝혔다.

▶ 독일의 귀테슬로에 위치한 베텔스만 재단을 방문한 이성보 위원장.

▼ 이성보 위원장이 IACA에 기여금을 전달하고 있다.

▲ 이성보 위원장이 OECD 사무총장과 다양한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중이다.

▶ UN 마약 범죄국을 방문해 기념촬영하는 이성보 위원장.

국제투명성기구(TI) "아시아 반부패기구평가 지수 개발 협조 요청"

유럽 방문 나흘 째 권익위 대표단은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TI를 방문했다. TI 측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사업인 CPI지수와 교육분야 등을 소개하고,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재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TI 측은 2013년 새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아태지역 반부패기관 평가를 소개하며, 아태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권익위처럼 활발하고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부패기구가 다수 있어 아태지역에서 반부패기관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TI 측은 평가관련 지수가 개발되면 권익위가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 지수는 반부패기관의 강점과 추가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여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임을 감안하여, 권익위는 향후 지수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내용을 검토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베텔스만 재단 "권익위 출범 이후 변화 궁금"

마지막 일정으로 권익위 대표단은 독일의 귀테슬로에 위치한 베텔스만 재단을 찾았다. 베텔스만 재단 측은 2008년 권익위가 출범하며 반부패 기능과 권익보호 및 행정심판 기능이 통합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 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기관통합으로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답했다. 베텔스만 재단 측은 권익위와 검찰과의 업무관계 및 협조에 대해서도 질문했고, 권익위는 2013년 6월 권익위와 검찰 간 MOU체결을 통해 향후 보다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베텔스만 재단은 OECD국가와 EU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속가능거버넌스지수(SGI) 보고서가 격년으로 발간되고 있는데 다음 보고서는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11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추진한 권익위의 실적이 반영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280개로 확대

산업기능요원이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못하고 방사선에 과다 피폭되는 작업환경을 신고한 결과, 해당 기업은 산업기능요원 종사 지정업체 등록이 취소되었다. 그러나 정작 공익신고자 강신현 씨는 회사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생산이 아닌 기획 분야에서 근무한 사실이 밝혀져서 「병역법」 위반으로 '440일 복무연장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강화돼 더는 자신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신고자가 없기를 바란다는 강신현 씨의 바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 6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공익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현행 180개에서 280개로 확대했다.

이전까지는 학교급식 관련 위생불량이나 불법 자동차 개조 등 위험 운행, 산업기술 유출 등과 같은 분야는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 적용을 할 수 없어 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한 사건이 전체 신고건수의 35%에 달할 정도. 이에 개정안에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따르지 않는 기관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조항도 추가됐다. 권익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결정을 일단 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신고자들은 권익위 조치를 둘러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행복 나누기

34
전통시장 나들이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그곳 울산신정시장

38
이야기 목민심서
공직자의 바이블, 새로읽는 「목민심서」

40
꼭 알아두세요!
장마철 안전하게 나기

42
건강 365
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여름 질병 '식중독' 조심하세요

44
감성충전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공생과 공존을 위한 공정여행

48
뉴스 & 피플

50
독자의 소리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그곳 울산신정시장

마음이 울적하고 쓸쓸한 날에는 시장을 가보라는 말이 있다. 오가는 사람들의 북적거림을 통해 꿈틀거리는 생명력을 느낄 수 있고, 정겨움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살아 숨 쉬고 있음을 깨닫게 되니까. 이처럼 삶의 의미를 부여했던 재래시장의 활기를 찾아간 울산신정시장. 시장 특유의 넉넉한 인심과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정겨운 이야기들을 담아보았다. 글 **이용규** 사진 **김민우**

울산 시민들의 추억을 간직한 보물창고

학창시절 소풍이나 수학여행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게임이 있었다. "시장에 가면 과일도 있고... 시장에 가면 과일도 있고, 생선도 있고... 시장에 가면 과일도 있고, 생선도 있고, 신발도 있고..." 큰 인기를 끌었던 이 노래의 가사처럼 신정시장은 세상에 없는 것들도 이곳에서 찾아보면 다 나올 것 같은, 도깨비 요술방망이보다 신기하고 풍족한 보물창고다.

지난 1970년에 형성된 신정시장은 울산 시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덕분에 교통이 편리하고 주위에 금융기관 및 관공서가 밀집해 있어 하루 이용자가 1만 명이 넘을 정도로 울산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있어야 할 것은 다 있고 없는 건 없는 것'이 시장의 매력이지만, 특히 신정시장은 칼국수, 족발, 튀김, 떡볶이, 빵 등 다양한 먹을거리와 신선한 채소와 과일, 해산물 등이 사시사철 준비되어 있다. 이밖에 포목전, 신발전, 그릇전, 잡화전 등 다양한 품목들이 구비되어 있어 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신정시장은 도심가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편리한 장점이 있다.

울산의 대표 전통시장, 신정시장의 모습.

그날그날 공수해온 싱싱한 물품들을 시장에서 맛보는 최고의 매력.

주문 즉시 면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정시장 칼국수집의 인기 비결.

신정시장 칼국수 골목은 30년 이상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명물거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물 골목

신정시장 정문으로 들어가 첫 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 국밥집이 연이어 자리 잡고 있다. 족발과 수육, 돼지국밥으로 유명한 이곳은 울산 시민들에게는 '먹자골목'으로 통하는 명물 골목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쫄깃한 식감의 족발을 비롯해 구수한 국물 맛이 일품인 국밥 한 그릇에 수육 한 접시면 출출한 허기를 달래기에 충분하다. 요즘처럼 무더위가 계속되는 여름철에는 닭발이 인기 메뉴라는데 경상도 특유의 맵고 칼칼한 맛에 막걸리 한 사발 곁들이면 이보다 더한 일미가 없을 터이다. 이곳에서 25년째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육육국밥〉의 김말임 사장은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가시는 모습이 좋아서 더워도 더운 줄 모른다고 말하고 웃는다.

먹자골목과 함께 신정시장의 명물로 꼽히는 칼국수 골목. 〈옛날 손칼국수〉, 〈신정 손칼국수〉, 〈경주손칼국수〉 등 칼국수를 전문으로 하는 가게들이 모여 있는 이곳은 주문과 동시에 즉석에서 칼국수 면을 썰어 조리하는 것이 특징. 신정시장에서 제일 오래된 터줏대감답게 이곳에서는 30년 경력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어르신들의 깊은 손맛이 최고의 자랑거리. 온종일 밀가루 반죽을 해야 하고 진한 육수를 우려내기 위해 불 옆을 지켜야 하지만, 이곳 할머니 사장님들은 오랜 세월 잊지 않고 찾아주는 단골들이 있어 힘들기보다는 고마운 마음이라고 입을 모은다.

시장은 한바가지 더 주는 넉넉한 인심이 살아있다.

좋은 제품을 정직하게 팔겠다는
상인들의 약속에 믿음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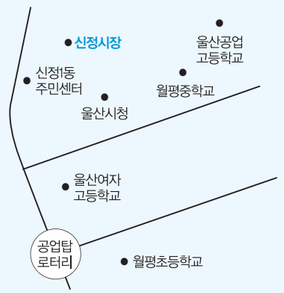
신정시장 먹자골목에는 국밥집이 즐비하다.

울산신정시장 찾아가는 길

주소 주소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30-1

문의 052-272-2085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ulsansj



전통시장의 자존심을 지켜나간다

지난 40년 세월 동안 울산 시민들과 함께 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해 온 신정시장. 인근 대형마트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신정시장이 지금도 울산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장으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이곳을 찾아준 고객들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상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는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원산지 표시를 생활화하여 이곳에서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고객 감동을 실천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 "정확하고 정직한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에 대한 기본 예의이며 상인의 의무이자 양심"이라는 현수막을 가게에 붙여 놓은 〈한일수산〉의 정인식 사장을 비롯해 신정시장 상인들은 좋은 제품을 싸게, 그리고 정직하게 판매할 때 전통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제 구태의연한 전통적 의미의 재래시장은 더 이상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 시장이 살아나려면 시장 상인들 스스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에 전통시장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신정시장 변화의 바람이 더욱 시원하게 느껴진다.

공직자의 바이블, 새로 읽는『목민심서』

글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성균관대 석좌교수 일러스트 이윤성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이자 행정학자이며 행정가이던 다산은 관존민비(官尊民卑)이던 그 시대에, 권력자들인 관(官)의 횡포에 시달리던 가난하고 천한 일반 백성들에게 어떤 행정을 펴고, 관인 공직자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공직에 임해야 하는가를 고경(古經)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목민관이 곧 청렴이다

청렴한 마음을 지니고, 청렴한 행정을 펴는 조항이 청심조항이다. 청렴에 대한 다산의 생각에는 가장 먼저 대원칙을 지키는 일이 있었다. 청렴에 대한 대원칙은 청렴이라는 덕목이 공직자, 특히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산은 "청렴은 목민관의 본질적인 임무다. 모든 착함의 원천이며,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라고 선언하였다. '목민관=청렴'이라는 공식을 정하고, 청렴하지 못한 어떤 공직자도 공무에 임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또 공직에 임해서는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고 분명하게 선언했다.

자기 자신을 규제하고 규율하는 것이 율기인데, 율기는 바로 어떤 탐욕이나 욕심도 제어하여 청렴한 마음을 지니고 청렴한 행위를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자신의 인격 수양과 심신의 단련이 율기에 해당하는데, 그런 수양과 단련을 통해 인간이라면 헤어나기 어려운 물욕(物慾), 권력욕 등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랐던 사람이 다산이었다.

"청렴한 사람은 청렴한 행정을 펴고도 마음의 편안함을 유지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청렴하게 생활하면서도 이롭다고 여긴다[廉者安廉 智者利廉]."라는 말에 다산의 뜻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그래서 다산은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했다. "청렴은 온 세상에서 가장 큰 장사이다. 욕심이 참으로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청렴하지 못한 사람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여 하급 벼슬아치로 끝나고 말겠다는 마음을 지니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벼슬에 오르고, 더 큰 지위를 얻어 무엇인가 더 훌륭한 일을 해보겠다는 공직자라면 당연히 청렴한 생활을 통해 벼슬이 오르고 지위가 높아지기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했다. 큰 욕심이 없이 낮은 벼슬에서 뇌물이나 챙기고 부정부패에 관련된다면, 어떻게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겠느냐는 반문에서 다산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지도자로서의 가장 큰 자격을 구비한 셈이다. 그래서 다산은 '속리'(束吏) 조항의 맨 첫 줄에 공자(孔子)의 말씀을 인용했다. "제 몸이 바르면 명령이 없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행동으로 옮기지만, 제 몸이 바르지 않고서야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따라주는 사람이 없다"[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라는 내용이다. 목민관, 즉 요즘의 시장·군수·구청장만 해도 수많은 공직자를 지도·감독하는 높은 지위의 지도자이다.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공직자를 지도·감독할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자신의 몸이 바르지 않고서야, 자신이 청렴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급 공직자들을 지도·감독하며, 강제로 명령을 내린다 해도 누가 따라주며 이행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다산의 뜻이었다.

바른 처신과 청렴만 이뤄지면, 반드시 속리는 가능하다

요즘과는 관료체계가 완전히 다른 옛날에는 목민관만이 '관'(官)이고, 나머지 관청의 직원이란 모두가 '아전'[吏]이었다. 그런 이유로 '관리'(官吏)라고 하면, 목민관과 아전을 합해서 부르는 이름이었다. 더구나 옛날에는 '아전'이란 상위의 신분도 아니고, 중인(中人)의 신분이었다. 비록 목민관을 대신하면서 막강한 힘과 권력을 지녔지만, 목민관의 입장에서는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처지였다. 그렇지만 조선시대의 '아전' 제도는 간단하지가 않았다. 그들은 대대로 세습하여 아전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한 지방의 토호들과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는데다, 어떻게 하면 일반 백성들에게서 착취와 탐학을 부릴 방법까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목민관이야 중앙에서 발령받아 내려오면, 지역의 사정이나 풍습·관행도 제대로 몰라, 목민관이 아전들을 지도·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아전들의 요령에 따라 지역을 다스리는 경우가 너무도 흔했다.

더구나 목민관은 근무 연한이 정해져 있어 언젠가는 떠나야 할 사람인데다, 더러는 수시로 교체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그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방법이 없었다. 그렇다 보니, 한 지역의 목민관은 지나가는 과객이고, 실제의 주인이자 권력자는 바로 아전들이었다. 목민관이 법률적 지위와 권위, 자신의 몸가짐과 청렴을 무기로 해서 아전들을 제대로 지휘·감독하는 일을 '속리'라고 하는데, 목민관의 가장 큰 직무 중의 하나였다. 한 지역의 다스림은 바로 '속리'의 여하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산이 살던 조선시대의 현실이었다. 요즘에는 하위 공직자들도 모두 공무원법에 의하여 신분을 보장받고 법에 의한 징계 이외에는 어떤 처벌도 불가능해서 하급관원을 통솔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아전들이야 조건 없이 상명하복의 관계인데다 생사여탈권이 모두 목민관에게 있었음에도 '속리'란 그렇게 어려웠는데, 항차 오늘의 공직사회에서는 '속리'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는가. 목민관 자신이 바른 처신과 청렴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고는 하급원들을 통솔하고 감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재의 우리 사회다.

그러한 사실로 미뤄보면, 옛날이나 현대에 목민관의 자격과 자질을 갖추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게 된다. 다산 시대에는 아전들이 일정한 월급도 없던 때였다. 그 당시 아전들이란 백성들을 괴롭혀 부당한 방법으로 착취해서 먹고 살던 때였다. 그래서 다산은 '속리' 조항에서, "아전들은 백성들을 전답으로 여기고 백성들은 흙을 전답으로 여겼다."[吏以民爲田 民以土爲田]라고 말하여, 아전들은 백성에게서 뜯어먹는 일을 농사짓는 일로 여겼고 백성들은 흙에서 농사지어 먹고산다는 해학적인 말을 다산이 했던 것이다.

문제는 목민관이다. 옛날이나 현재, 목민관의 부정·부패는 하급관원들과 공모·합작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다. 옛날의 목민관은 언제나 아전들과 결탁하여 백성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탐관오리(貪官汚吏)'라고 해서 '관리'를 함께 부르면서 부패와 부정의 상징으로 여겼던 것이다. 어떤 경우이건, 관의 묵시적 동의나, 암묵적 지시에 의해서 수탈과 착취가 자행되기 때문에, 옛날이나 현재에 목민관이라고 해서 부정·부패에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현대의 목민관들이야 예전과는 다른 조건에 있다. 공직자는 그래도 먹고 살아갈 정도의 봉급이 지급되고, 신분보장은 물론 퇴직한 뒤에도 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다면, 목민관은 이들에게 큰소리치면서 지도·감독할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것이 아닌가. 결국 자신의 바른 처신과 청렴만 이뤄지면, 반드시 '속리'는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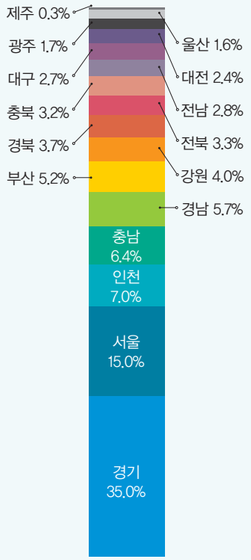
장마철 안전하게 나기

올해도 어김없이 장마는 많은 비를 뿌리고 끝났다. 그리고 장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침수와 산사태, 홍수 등 크고 작은 수해들만 가득 남았다. 해마다 반복되며 자연과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장마. 어떻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글 김현선

지난 3년 5개월간(2010.1~2013.5)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장마 및 집중호우 민원

지역	건수
경기	4,559
서울	1,951
인천	905
충남	837
경남	737
부산	678
강원	524
경북	484
전북	431
충북	420
전남	367
대구	355
대전	307
광주	220
울산	203
제주	41
계	13,019



이제 상추에 고기를 싸 먹는 것이 아니라, 고기에 상추를 싸먹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연이은 장맛비에 상추 수확량이 작년보다 70%나 줄었기 때문이다. 배추도 마찬가지. 다 자란 배추가 물러 썩어버리는 '무름병'에 걸려 정선의 고랭지 배추밭에서는 3000㎡의 밭을 갈아 엎애기도 했다. 때문에 농산품 물가는 폭등해 평균 4배까지 가격이 뛰었다.

농수산물의 피해 이외에도 장마 피해는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유독 많은 비가 내렸던 중부지방은 피해가 더 심했다. 강원 영서 지방에 시간당 최고 5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탓에 춘천에서는 7월 16일 기준으로 155가구, 66곳 도로가 침수됐다. 22년 만의 기록적인 강수량에 사람들은 모두 발만 동동 구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www.epeople.go.kr

장마철 민원,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세요

이렇듯 해마다 급증하는 장마철 수해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장마철 관련 민원을 분석했다. 앞으로 있을 장마철 수해 대비에 활용하도록 일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기 위함이다.

먼저 지역별 민원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원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였다. 경기도의 민원은 전국에서 35%를 차지하며 15%를 차지하는 서울보다도 월등히 많은 건수가 집계됐다. 그 뒤를 이어 인천이 7.0% 충남이 6.4%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용인시와 광주시, 고양시 등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으며, 시흥시와 연천군, 평택시 등은 예년보다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간 발생한 민원 유형을 분석해 보면 '장마 피해 우려 등 기타'가 28.1%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배수 및 하수 시설 정비 요청'에 관한 민원이 24.1%를 차지했으며 '농경지, 시설 등 침수 우려 및 예방 조치 요청'도 10.4%를 나타냈다. '도로 유실 위험 및 정비 요청'과 '토사 피해 우려 및 방지 요청' 등은 모두 10% 미만의 비중을 차지했지만, 건수로는 20건수를 넘겨 피해가 작지 않음을 짐작하게 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장마 및 집중호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최근 민원 증가율이 높은 기관에서는 수해 예방 및 대응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장마 피해, 대비부터 차근차근

일단 호우가 예상된다면, 주택의 하수구와 집 주변의 배수구의 흐름이 원활한지 살펴야 한다. 하수구나 배수구가 막혀 있다면 물이 넘치거나 고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천주변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응급 약품과 손전등, 식수를 준비한다. 위험해 보이는 공사장이나 비탈면 등은 예방 차원에서 관리자에게 미리 신고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호우가 오래되면 하천과 강 주변에서는 홍수가 일어나기가 십상이다. 갑작스럽게 물이 밀려들어 온다면, 수압에 의해 시설물이 파괴되고 순식간에 휩쓸려 갈 수 있다. 그래서 주변 하천과 둑에 물이 넘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떠다닐법한 여러 가지 물건들은 집 안으로 옮기고,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면 농경지 주변의 범람을 막을 수 있다.

만약 천둥이나 번개가 치면 뾰족한 곳이나 높은 곳을 피해 건물 안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가로등이나 신호등 같은 고압전선 근처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 혹시나 정전됐을 때는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수리를 하지 말고 촛불로 대처해야 한다. 또 얕은 물이라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흐르는 물은 높이가 무릎까지만 와도 사람이 떠밀려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피할 때는 라디오와 TV 등을 통해 기상 변화를 잘 파악하고,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날씨가 갠 후 물이 빠져나갈 때도 방심할 수 없다. 범람했던 물에는 기름이나 오염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물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 또 몸을 깨끗이 씻고 주변 환경도 청소를 꼼꼼히 해야 장마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혹시나 수해를 입었다면 비가 그친 다음 2차 피해 가능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작은 수해는 주민과 협력해서 할 수 있겠지만, 도로 유실이나 산사태 등 규모가 크고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수해는 지역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안전하다.

최근 3개월간 발생한 민원 유형
(2013.4~2013.6)

민원유형	건수	비중(%)
배수 및 하수 시설 정비요청	104	24.1
농경지, 시설 등 침수우려 및 예방조치 요청	45	10.4
도로 유실 위험 및 정비 요청	41	9.5
토사피해 우려 및 방지 요청	32	7.4
쓰레기(오물) 및 나무 등 제거 요청	25	6.0
시설물 붕괴 및 유실 위험	24	5.6
하천 제방 등 정비 요청	23	5.3
산사태 위험 및 예방조치 요청	15	3.5
장마피해 우려 등 기타	121	28.1
계	431	100

도로유실이나 지반붕괴: 국토교통부 1599-0001
산사태: 산림청 1588-3249
송전탑과 가로등 파손: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
민원 상담: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

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여름 질병 '식중독' 조심하세요!

식중독균이 왕성하게 번식하는 계절인 7~8월,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먹거리 안전에 이상 신호가 켜졌다. 가정이나 밖에서 먹는 그 어떤 음식도 안전하지 않다! 건강이라는 자물쇠를 꼭 걸어잠그고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름철 대표 질병 '식중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글 **백경미**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어젯밤 덮고 잔 이불도 눅눅하고 빨아 널은 옷도 눅눅하고 집안 전체가 눅눅한 것이 불쾌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상황이니 음식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 금방 상할 것을 염려해 음식은 만드는 즉시 냉장고로 직행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먹기 전 확인부터 하기 일쑤이다.

얼마 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냉면, 콩국수, 빙수 등 여름철 대표 음식에서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다수 검출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평균기온 23~30℃, 평균습도 60~80%이면 식중독 지수 '경고 단계(50~85)'에 해당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식중독균이 왕성히 증식하므로 음식물을 소홀히 관리하면 4~6시간 이내에 부패할 수 있다.

식중독, 도대체 왜?

식중독은 식중독을 일으키게 되는 여러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등이 원인균으로 알려졌으며, 원인에 따라 잠복기와 증상의 정도가 다르다.

장마철에는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 하수나 하천 등이 범람해 병원성 대장균과 같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균에 오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매우 적은 양으로도 인체 감염을 일으킬 정도로 감염력이 높다. 지하수 등 오염된 물로 식품을 세척한 후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할 때 감염이 될 수 있다. 여름뿐만 아니라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도 많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식중독에 감염되면 6~48시간 이내에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보통 2~3일 이내에 특별한 치료 없이도 좋아지지만,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노인들은 쉽게 치유되지 않아 설사에 의한 탈수 증상이 올 수 있다.

식중독 증상을 보일 때는 끓인 물이나 보리차 등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탈수를 예방하고, 설탕 또는 소금을 넣은 물이나 이온음료를 섭취하도록 한다. 단, 탄산음료나 과일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식중독은 심각한 상태를 제외하고는 수일 내에 회복되지만, 증상이 쉽게 호전되지 않을 시에는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도록 한다.

이것만 알아두면 문제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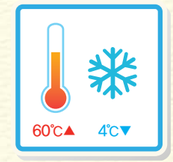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종 전염성 질병의 70%가 손을 통해 발생하게 되므로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손을 비누나 세정제로 20초 이상 꼼꼼하게 문질러 닦도록 한다. 특히 귀가 후, 화장실 사용 후, 식사 전 및 조리 시작 전·후에 신경 써서 관리한다.

식재료는 적정량을 구매하고, 모든 음식물은 익혀 먹도록 한다. 식품 조리 시에는 반드시 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하고, 남은 가열조리 음식은 될 수 있으면 재사용하지 않는다. 굴 등 패류는 생식을 자제하고, 비가열식품은 반드시 물에 깨끗이 씻어서 섭취, 침수되었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채소 및 과일류는 반드시 폐기한다.

물은 반드시 끓여 먹고, 행주, 도마, 식기 등은 매번 끓는 물 또는 가정용 소독제로 살균한다. 조리기구, 조리대, 개수대는 세정제로 세척 후 200배(염소농도 200ppm) 희석한 가정용 염소소독제(락스 등)로 소독하고, 화장실 변기, 문 손잡이 등은 50배(염소농도 1,000ppm) 희석한 염소소독제로 소독한다. 냉장고를 맹신하는 것도 금물이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의 유통기한 및 상태를 자주 확인하고, 4℃에서 60℃의 온도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온도 구간이므로 뜨거운 음식은 60℃ 이상으로 보관, 찬 음식은 4℃ 이하로 냉장 보관한다.

개인위생 관리

모든 음식 가열



적정온도 유지

피서지에서의 식중독 주의하세요!

1. **도시락을 준비했을 경우** 4시간 이내에 섭취하고 될 수 있으면 자동차 트렁크나 내부에 음식물 보관을 피한다.
2. **캠핑장**에서는 식품의 냉장 · 냉동 보관이 어려우므로 준비한 식재료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빨리 섭취한다. 특히 미생물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익히지 않은 고기와 과일, 야채류를 서로 닿지 않게 분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계곡으로 피서를 떠났다면,** 민물고기 및 민물패류는 기생충의 중간숙주이므로 섭취를 자제한다. 인근 지하수나 샘물 등은 반드시 끓여서 마신다.
4. **김밥, 샌드위치, 도시락 등을 구입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음식물의 조리시간과 유통기한을 확인하도록 한다. 구입한 후에는 바로 섭취하고 2시간 이상 상온에 방치한 제품은 폐기한다. 노점상 등에서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5. **바닷가에서 직접 잡은 어패류**는 반드시 깨끗한 수돗물로 2~3회 세척 · 조리하여 섭취하는데, 이때 바닷물로 세척하는 것은 금물이다. 특히 장염비브리오균이 많이 있는 내장 및 아가미 부위는 제거하고 먹는다.
6. **산에서는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하거나 독버섯을 식용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야생식물은 채취나 섭취를 자제한다. 산나물은 고유의 독성분을 미량 함유하고 있어 반드시 끓는 물로 처리하여 먹는다.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공생과 공존을 위한 공정여행

Fair Travel

프랑스 작가 알랭 드 보통은 〈여행의 기술〉에서 "여행할 장소에 대한 조언은 어디에나 널려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와 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듣기 힘들다"고 했다. 전세계적으로 여행자들이 늘어나고, 여행방식도 다양 해지면서 여행을 Where(장소)가 아닌 How(방식)의 어법으로 풀어내려는 이들의 생산적 담론들이 활발하다. 개념여행, 책임여행, 도덕여행, 윤리여행, 착한여행, 지속가능한 여행, 생태여행으로 불리지만 모두 여행지의 사람, 역사, 환경, 경제, 문화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최우선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글 김남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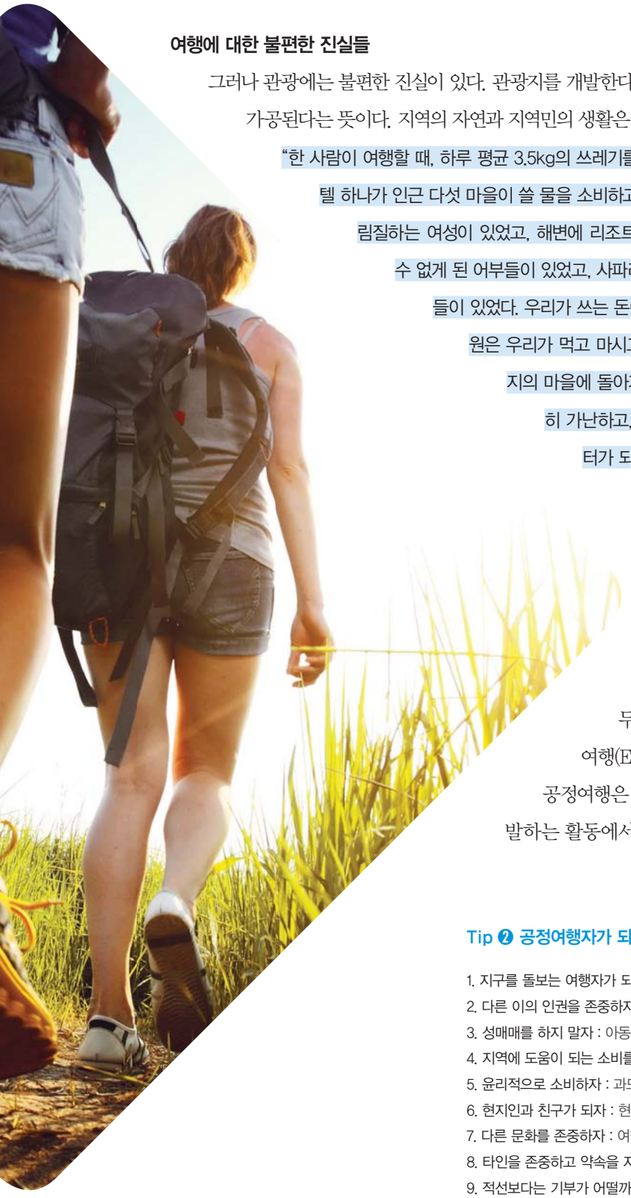
여행을 뜻하는 영어 단어 'travel'의 어원은 'travail(고통, 고난)'이다. 동물이나 마차가 주요 운송수단이었던 시절 산 넘고 물 건너 바다를 건넌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그러나 19세기 철도가 들어서고 기차가 등장하면서 여행은 더 이상 고통이나 고난이 아닌 쾌락이나 오락으로 치환된다. 역마차로 4~5일씩 걸리던 거리가 기차로는 단 5시간이면 도달하게 된 것이다.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발달로 인해 여행은 점점 대중화가 되었고 자본주의와 절묘하게 결합되면서 서비스 개념이 강화된 관광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여행업자들은 4S(sun, sea, sand, sex)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여행 '상품'들을 세계 곳곳에 만들어서 대중들을 유혹하기 시작했다. 더 많은 여행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더 매력적인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쉴 거리를 제공하는 개발을 거듭했고 관광은 서비스업의 꽃이라는 화려한 닉네임 아래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Tip ❶ 국내로 떠나는 공정여행

체험마을 여행 : 농어촌 체험마을 여행을 통해 현지인들과 교류하고 그곳에서 생산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고 그곳의 농수산물을 구입해보자. 다양한 체험마을에 관한 정보는 농촌전통테마마을(www.go2vil.org)에서 얻을 수 있다.

걷기 여행 : 걷기 여행은 그 자체가 친환경적다. 전국적으로 올레길, 둘레길 등 다양한 걷기 코스가 많다. 특히 올레길로 유명한 제주도에서는 해군기지 건설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강정마을을 걷는 강정평화대행진이 지난 7월 29일~8월 3일까지 5박 6일 동안 열렸다. 제주생태관광(www.storyjeju.com)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역 축제 여행 : 지역 축제는 그 지역의 특별한 공연과 놀이, 먹을거리, 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축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고하면 된다.



여행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

그러나 관광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관광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자연과 문화가 관광객을 위한 상품으로 인위적으로 가공된다는 뜻이다. 지역의 자연과 지역민의 생활은 뒤로 밀리고, 돈을 내고 살 만한 것들 위주로 각색되어버린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여행할 때, 하루 평균 3.5kg의 쓰레기를 남기고 남부 아프리카인보다 30배 많은 전기를 쓰고, 인도 고아의 오성급 호텔 하나가 인근 다섯 마을이 쓸 물을 소비하고 있었다. 아름다운 호텔 뒤편 세탁실에는 점심시간 '10분' 외에는 종일 서서 다림질하는 여성이 있었고, 해변에 리조트가 들어서면서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고기잡이를 할 수 없게 된 어부들이 있었고, 사파리 관광 리조트에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땅을 빼앗기고 강제이주 당한 소수부족들이 있었다. 우리가 쓰는 돈이 100만원 이라면, 그 중 40만원은 비행기에, 그 중 20만원은 여행사에, 20만원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쓸 물건을 수입해 오는데 지불되고 현지에 남는 돈은 20만원. 그 중에서 현지의 마을에 돌아가는 돈은 1~2만원뿐이다. 관광개발은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숲은 파괴되었고, 바다와 땅을 잃은 이들은 호텔의 일용직 청소부, 짐꾼, 웨이터가 되었다." – 〈희망을 여행하라〉(이매진피스, 임영신, 이혜영 공저) 중에서 –

호텔이나 리조트가 화려하게 치장될수록 해당 지역의 자연 환경은 초토화되고 아름다운 전통문화들이 변질되며 해당지역민들의 삶 또한 피폐화되는 현실. 우리가 바라는 여행이 이런 것인가? 이런 여행이 과연 행복한 것인가? 이러한 불공정함에서 벗어나 재미와 의미를 갖는 대안적인 여행 방식으로써 '공정여행'이 대두되기에 이른다. 사실 공정여행은 한국식 용어다. 영미권에서는 도덕적 여행(Ethical Travel), 책임여행(Responsible Travel) 등이라고 부른다.

공정여행은 유럽인들의 몰지각한 관광으로 파괴된 동남아와 아프리카의 참상을 고발하는 활동에서 시작되었다. 그 출발은 영국이다. 1988년 영국의 시민단체인 투어리즘 컨선(Tourism Concern)은 관광개발의 폐해를 알리고 여행자들의 책임과 윤리적 행동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 1989년 미국에서는 글로벌 익스체인지(Global Exchange)를 통해 미국 정부의 경제봉쇄로 고통 받는 쿠바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연대하는 새로운 여행, 또 남미와 아프리카의 공정무역 현장을 찾아가 커피를 추수하고 카카오를 따며 희망을 나누는 여행이 시작되었다. 2001년에는 최초의 공정여행사 '리스폰서블트래블닷컴(responsibltravel.com)'이 설립되는데 전 세계 공정여행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다루는 인터넷 여행사로 5대륙 160여 개의 국가에서 공정여행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는 북한도 있다.

Tip ❷ 공정여행자가 되는 10가지 방법

1. **지구를 돌보는 여행자가 되자** : 비행기 이용 줄이기, 1회용품 쓰지 않기, 전기와 물을 낭비하지 않기
2. **다른 이의 인권을 존중하자** : 직원에게 적정한 근로조건을 지키는 숙소와 여행사 선택하기
3. **성매매를 하지 말자** : 아동 성매매, 섹스관광, 성매매 골프관광 등을 거부하기
4. **지역에 도움이 되는 소비를 하자** :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 음식점, 여행사, 교통 이용하기
5. **윤리적으로 소비하자** : 과도한 쇼핑 하지 않기, 지나치게 깎지 않기, 공정무역 제품 이용하기
6. **현지인과 친구가 되자** : 현지 인사말, 춤이나 노래를 배워보기, 작은 선물 준비하기
7. **다른 문화를 존중하자** : 여행지의 생활 방식과 종교를 존중하고 예의 갖추기
8. **타인을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자** : 사진을 찍을 땐 허락 구하기, 현지인과 한 약속 지키기
9. **적선보다는 기부가 어떨까** : 여행 경비의 1%는 현지의 사회단체에 기부를!
10. **부당한 일에 목소리를 내자** : 동물 학대, 인권 유린 등 부당한 일을 목격한다면 시정 요청하기

출처 : 〈희망을 여행하라〉(이매진피스, 임영신, 이혜영 공저)

사람, 자연, 문화, 지역을 살리는 여행

공정여행의 개념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사람, 자연, 문화를 배려하고 존중함으로써 여행자도 즐겁고 여행지도 살리는 것이 핵심이다. 다시 말해 여행지의 자연을 보호하고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며 여행경비가 현지 지역사회와 지역민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물론 내 돈 주고 내 시간 들여 맘 편하고 몸 즐겁게 여행한다는데 환경보호니, 지역경제 살리기니 하면서 신경을 쓰는 게 골치 아프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여행의 실속과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그러면 공정여행은 그리 어렵지 않다. 국내든 국외든 상관없고 배낭여행이나 고가의 패키지여행이라도 괜찮다. 가고 싶은 여행지를 먼저 정한 다음 여행 방식을 공정하게, 착하게, 도덕적으로 계획하면 된다. 가령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비행기 이용을 줄이고,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며, 입맛에 맞는 먹거리 대신 원주민들과 함께하는 현지인 식사를 하고, 학대당하는 동물들의 쇼는 구경하지 않으며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로 만든 기념품을 사지 않는 식이다. 또 일회용품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 발생을 줄인다면 당신은 이미 공정여행자다!

Tip ❸ 국내 공정여행 관련 단체

국제민주연대(www.khis.or.kr) : 국내 최초로 자체 공정여행 패키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정여행 대중화에 기여. 차마고도 윈난, 귀주, 내몽골, 백두산, 샹크릴라 티벳, 만주 등 공정여행프로그램 운영 중.

이매진피스(www.imaginepeace.or.kr) : 2007년부터 공정여행 축제 개최. 평화여행이라는 주제로 공정여행프로그램 운영.

로드스꼴라(roadschola.haja.net) :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하자'와 여행협동조합 '맵 MAP'이 함께 기획한 '생각 있는' 여행 기획자를 기르는 학교. 공정여행에 관한 정보와 이들이 개발한 국내 공정여행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제공. 주말여행학교 지구별여행자 프로그램 운영 중.

공감만세(www.fairtravelkorea.com) : 공정여행 청년 사회적 기업. 국내외 다양한 공정여행 프로그램 운영 중.

착한 여행(www.goodtravel.kr) : 공정여행 사회적 기업. 국내외 다양한 공정여행 프로그램 운영 중.

트래블러스맵(www.travelersmap.co.kr) : 여행부문 1회 사회적 기업. 국내외 다양한 공정여행 프로그램 운영 중.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NEWS & PEOPLE

2013.7+8

01 권익위-인도네시아간 MOU 연장 체결과 뉴사우스웨일즈 옴브즈만 협력회의 성황리에 마쳐

권익위는 한-인니 옴부즈만 양자협력(MOU)을 연장 체결하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옴부즈만과 협력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이번 일정은 인도네시아와 호주에 직접 방문해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는 다수 한국기업과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제도의 차이로 우리 기업과 재외국민이 피해를 많이 입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권익위가 방문하여 인도네시아의 행정기관에 부당한 처분에 대한 고충을 제기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협조를 요청할 통로를 마련했다. 한편,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 옴부즈만에서 활용 중인 '비이성적 민원인 행동 대응 매뉴얼'은 호주의 공공기관에서도 호평을 받을 정도로 효율적인 매뉴얼로, 권익위도 한국형 특이민원 대응전략을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협력회의를 진행했다.

02 권익위, 충청북도 지역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지난 7월 17일 청주시청, 18일 증평군청, 그리고 19일 제천시청을 방문했다. 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 · 환경, 농림 등 10개 분야로 편성되어 상담 조사관들이 지역 주민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들었다. 특히, 이번 이동신문고는 행정심판 접수 상담, 공공분야 예산 낭비와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 · 안전 · 환경 ·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침해 신고 접수도 병행했다. 아울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민간단체 · 기업 후원 등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복지분야 상담사도 함께했다. 또한, 개별 민원상담과는 별도로 현장조정회의도 개최됐다.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3개 마을 주민의 집단 민원으로, 원주~제천 간 전철 복선 사업의 하나로 설치하는 U자형 주포과선교의 직선화에 대한 것이었으며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중재안을 이끌어냈다.

03 권익위-검찰, '부정부패 척결' 공동 대응

권익위는 지난 6월 25일 대검찰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부패 및 공직비리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앞으로 수사와 조사 분야에 종사하는 인적 자원을 교류하고, 양 기관의 협력으로 얻은 성과를 공유하며, 원활한 협약이행을 위한 기관간 정례협의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권익위와 대검찰청은 궁극적인 '국가 반부패 대응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성보 위원장은 "공직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고,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청렴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반부패 청렴 정책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와 최고의 법 집행기관인 '대검찰청'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 만큼 양 기관이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4 권익위-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 윤리경영 확산 공동 협력"

권익위와 전경련은 기업의 윤리경영 의식 확산을 위해 지난 7월 17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소통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내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윤리와 관련한 국내 · 외 추세에 대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 홍보활동도 공동으로 추진하여 기업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또, 권익위와 전경련은 앞으로 일부 교육과정을 통합해 운영하는 '(가칭)윤리경영 아카데미'도 개설하고, 권익위의 청렴연수원을 활용해 민간기업의 윤리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윤리경영 우수 실천사례의 발굴 · 전파 등을 위해 사례집도 공동으로 발간하기로 했으며, 이날 업무협약(MOU) 체결을 기념해 권익위가 자체 개발한 '산업별 기업 윤리경영 모델' 책자 100부를 전경련에 제공하고 민간기업에서 활용하도록 하였다.

05 권익위, 태국 옴부즈만과 자국민 권익보호위해 협력 논의

지난 7월 17일, 권익위는 태국 옴부즈만과 협력해 상대국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연락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행안에 따라 우선, 상호 자국 거주 상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동신문고를 적극운영하고, 우리나라의 정부민원포털사이트인 국민신문고에 개설된 두 기관 공동 민원접수창구를 자국민과 상대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방한한 태국 옴부즈만 일행은 15일부터 17일까지 권익위의 고충민원처리시스템, 국민신문고,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등 옴부즈만 관련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태국 옴부즈만은 장관급 기관으로 활발한 권익구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태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양 기관 간 MOU 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6 공공기관 청렴시민감사관 담당자 '멘토스쿨' 개최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7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소재 권익위 대강당에서 '멘토스쿨'을 개최했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공공기관이 시민 또는 외부전문가를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여 전문성 및 투명성이 필요한 사업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시 등을 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다. 이날 '멘토스쿨'에서는 제도를 신규 도입했거나 도입 준비 중인 20여 개 기관과 이미 도입한 기관의 실무자가 모여 멘토 · 멘티 기관 간의 소그룹 멘토링을 통해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또한, 권익위는 연말에 우수기관의 운영사례집을 발간 · 전파할 예정이다.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국민권익 Q&A'는 실례를 통한 부연 설명이 있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혹시나 권익위에 신고할 일이 있다면 이 예시를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대에 발맞추어 남성평등에 관한 이야기, 여성인권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면 좋겠네요. 남녀노소가 공감할 수 있는 기사 부탁합니다. **이정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우리 아이는 뚱뚱? 아니면 통통?' 기사를 읽으면서 아이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비만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집안에서 엄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겠죠. 기사 덕분에 유익한 정보 얻어 갑니다. 앞으로의 건강관련 이야기도 기대되네요. **김태현** 경기도 군포시 수리동

국민행복제안센터 개설이야말로 시대적 요구에 적절할 뿐 아니라 생활고 고충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희망의 손짓이 될 것입니다. 국민 생활과 직간접적인 이야기, 그리고 사회의 틈새 구석구석에 숨겨진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십시오. 부디 서민 소외계층의 고충 발굴에 더욱 힘써주시고, 그 이야기를 〈국민권익〉에서 만나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박광서**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우리 제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제주, 문화, 그리고 힐링'! 다른 매체에서도 제주를 많이 소개하지만, 〈국민권익〉의 테마식 접근 방법이 신선하고 기사 또한 좋았습니다. 제주의 문화공간을 보니 값비싼 국외여행은 부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에 테마가 있는 여행지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안동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수원 못골 시장의 내용을 읽다 보니 그동안 잊고 지냈던 무언가를 발견한 듯 반갑네요. 어느덧 대형마트의 편리성에 익숙해져 있지만, 여건이 닿는 대로 재래시장의 정과 맛을 듬뿍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에서도 지방 곳곳의 다양한 시장, 소개해주세요. **홍승균** 충남 아산시 남부로

ACRC QUIZ

1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에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 일자리 창출, 그리고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방식은 무엇일까? (10페이지 참조)

❶ 국민 3.0 ❷ 소통 3.0 ❸ 정부 3.0

2 지난 1965년 섬진강댐이 건설되면서 생긴 호수로 인해 섬처럼 고립된 마을이다. 앞으로는 옥정호가 뒤로는 험난한 산이 있어 48년 동안 고립된 상태로 지내다 지난 6월 권익위의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마을의 육로가 개설될 수 있게 되었다. 이 마을 이름은? (24페이지 참조)

❶ 수상마을 ❷ 수암마을 ❸ 수경마을

3 여행지의 자연을 보호하고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며 여행경비가 현지 지역사회와 지역민에 보탬이 되는 여행은? (44페이지 참조)

❶ 공정여행 ❷ 문화여행 ❸ 지역여행

지난호 정답 :

1. ③국민행복제안센터
2. ③공직자 행동강령
3. ②수원 못골시장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들을 엽서에 적어 보내주세요.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다섯 분을 추첨해 전통시장상품권을 드립니다. 7+8월호 응마모감은 8월 30일까지며, 5+6월호 당첨자 상품은 8월 23일 등기우편으로 발송 예정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4대 중증질환부터

의료비 걱정, 건강보험이 책임지겠습니다!

*4대 중증질환 :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 꼭 필요한 의료!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의료비 부담이 크고 치료효과가 우수한 수술, 의약품, 검사 등은 모두 건강보험 적용
– 가격이 비싼 최신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일부 비용 지원

사례 1 — 대장암환자 A씨
총진료비 1,918만원
본인부담금 현재 1,625만원 → 향후 98만원
* 수술 후 고가항암제 투여 등

사례 2 — 뇌졸중 환자 B씨
총 진료비 799만원
본인부담금 현재 230만원 → 향후 53만원
* 뇌동맥류 수술

▸ 연도별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의약품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 * 약가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보험 적용		
검사·수술	초음파검사 (10월)	영상검사 (MRI 등)	·방사선치료 ·수술 관련 의료행위	·검사(유전자 검사 등) ·교육상담료
치료재료			·심장·뇌수술 재료 ·행위 연계 수술재료	·일반 수술재료

● 국민 부담은 최소화 하겠습니다.

– 재원은 건강보험 적립금과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조달
– 건강보험료는 물가수준 및 수가인상 등을 고려해 통상적 수준에서 관리
*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 : 3.04% ('14년 인상률 : 1.7%)

● 4대 중증질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4대 중증질환 이외 다른 질환의 건강보험 혜택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콜센터 129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고객센터 1577-1000

HIR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고객지원센터 1644-2000